

## 김정은 체제의 과제와 변화전망

### 개 관

-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3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하고, 권력세습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특히 노동당 규약을 개정, 조선로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성격을 변경하고 북한을 '김일성 조선' 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동시에 '당 건설의 계승성 보장'을 명시하여 3대 세습을 뒷받침하는 정당성을 마련하였음
-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2011.12.17)을 계기로 북한은 2011년 12월 31일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 2010년 10월 8일자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음. 이어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를 개최,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노선을 실현해 나갈데 대하여'와 '김정은의 영도밑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데 대하여' 규제하는 당 규약을 개정하였음. 또한 2012년 4월 13일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 김정은을 국가의 최고수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음.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법적·기구적 보장을 마련하였음.
- 김정은이 당·정·군의 최고직책을 장악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이 공식출범하였으며, 김정은 시대가 열린 것임.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 초고속 압축적 후계과정을 거쳐 권력승계를 하였음. 이러한 권력승계로 김정은 체제는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나, 3-4년 이후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리고 있음
- 따라서 본문에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추진배경 및 과정을 정리하고 김정은 권력체제가 성공적으로 승계하여 정착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과 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음. 그리고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발표된 주요정책 방향에 대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요건들을 분석하였음. 끝으로 김정은 체제의 변화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망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음



- 1인 권력 집중체제에서 지도자의 교체는 권력내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 될 수 있음. 새로운 인물이 주민들의 지지 속에서 권위를 확보해 가는 것과 당·정·군을 비롯한 권력층 속에서 실질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임. 권력승계 과정은 체제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즉, 체제존속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권력세습 문제는 북한정권의 안정성을 비롯한 체제생존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그 진행과정 및 상황에 대한 추적·평가를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 권력세습 추진 배경

#### (가) 북한 후계자 이론

- 수령 절대주의 및 수령론
  - 수령 절대주의는 수령이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이며, 수령론은 모든 것의 중심에 인민대중이 있고, 인민대중의 중심에 수령이 있다는 논리
- 후계자론, 계속혁명론
  - 후계자론은 북한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부자세습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
  - 후계자론에서 후계자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최고의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직책에의 취임이 다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방
  - 후계자론은 권력승계를 단순한 권좌의 승계가 아니라,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차원으로 이론화한 것이며, 계속혁명론과 연계
- 후계자의 자격 요건
  - △수령에 대한 충실성, △비범한 사상 이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 덕성,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 △수령과 후계자는 다른 세대

※ 수령에 대한 충실성 : 후계자의 품격과 자질에서 핵심을 차지, 이는 수령이 내놓은 사상과 수령이 이룩한 혁명위업에 대한 후계자의 충실성 의미

### (나) 김정일의 권력세습

○ 김일성은 1943년 이미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다 한다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야 말 것”이라고 언급

○ 권력세습이 당연시 되는 정치풍토

-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으로 인해 1인 독재 및 김일성 가계내 세습에 유리한 정치풍토 마련

-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 후계자 신격화, 수령절대주의 체제 확립, 「수령론」 및 「후계자론」 등의 제시·확산을 통해 세습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전 사회적·제도적으로 정착

- 특히,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 10대 원칙”을 감안하면, 제3의 인물 승계나 집단지도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세습의 경우에 가장 확고하게 보장

- 「후계자론」에서는 수령의 ‘사상과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으로 표현, 이는 곧 수령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의미

- 수령의 사상과 혁명위업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에 가장 용이한 후계체제는 3대 세습체제이며, 이를 통해 김정일은 사후에도 안정적 지위 보장이 가능

### (다) 김정은 후계 권력세습 제기 배경

○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후계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

- ‘08. 8월 발생한 뇌졸중은 김정일 건강상태가 심각함을 인식, 후계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



- 또한 권력층도 김정일 건강이상이 체제와 자신들의 장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우려, 후계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 절실히 인식
- 주변 권력 핵심그룹에서 김정일이 가장 총애하는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전격 천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o 김정일이 수개월간의 병고 이후 복귀한 후 대내외 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변화의 흐름이 조성되고 동시에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 김정일은 새로운 전환적 계기 마련을 위해 2008년 12월 24일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구 강선제강소) 현지도도 실시
- 이곳은 1956년 12월 28일 김일성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현지도도를 통해 '천리마운동'을 발기한 곳
- ※ 12월 24일은 김정숙 생일, 김정일이 인민군 총사령관 취임(1991년)한 날
- 김정일은 2008년 12월 24일 현지도도를 통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전성기를 펼쳐 나갈 것'을 강조
- ※ 2009년 1월 1일 신년공동시설은 이 현지도도를 '선군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12월 24일'이라고 표현, '혁명적 대고조'라는 용어를 19회 반복
- ※ 또한 '천리마운동'의 노력동원과 자력갱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강화 등 보수적 정책방향 제시와 체제결속을 위한 사회통제 등 강조
- o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
- 김정은 생일(1월 8일) 계기로 후계자의 지명에 대한 지시를 조직지도부를 통해 하달하고 주민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김정은 체제 출범과 승계요건

### (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경과

#### 1) 후계체제 구축과 권력기관과의 관계

- 2009년~2010년에 후계체제 구축 위한 통치조직 정비 차원에서 군부, 경제부  
문, 행정 및 공안의 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기관의 역할 증대에 대비, 기구 개  
편과 대폭적인 인사 개편
- 군부는 국가안전보위부, 호위사령부 등 핵심 권력기관의 인사 등 김정일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인 100여명의 장성급 승진인사 조치
- 과거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통치는 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가 핵심 역할을  
해 왔으나, 김정은의 경우는 군대, 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공안기관 중심으로  
후계통치
- 동시에 당의 기능과 체제 정상화 조치

#### 2) 헌법 등 주요법, 제도 제·개정

- '09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명시, 정상적 국가체제 확립
- '98년 이후 '국방위를 중추로 하는 국가영도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용, '09 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 '03년부터 선군사상을 '우리당의 지도적 지침', '지도사상' 등 실질적 공식 이  
데올로기 확립
- 후계체제 관련 항목별 특징
- 국방위원장을 최고 국가영도자로 명문화
- 국방위원장을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시, 당 중앙군사위원장과 위



상차별 명확히 함

※ 당 중앙군사위원장은 군사지휘권, 국방위원회의 군사지휘 통솔권이 중복되어 최고사령관의 소재 불분명한 점을 해결

- 국방위원장의 '국가전반사업지도' 신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주요 권한도 이관

- 국방위원회를 '최고군사지도기관' → '최고국방지도기관' 격상

○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2012.4.13) 통해 김정은 중심 국가체제와 김정일 위상 설정을 위한 헌법 개정

- 헌법 서문에 김정일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 법령화

※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 국가기구 부분 수정, 보충

△ 최고영도자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 김정은 추대

△ 최용해, 김원홍, 리명수 국방위 위원 보선

### 3) 권력 세습 분위기 조성

○ 후계자 내정사실이 일선단위 까지 확산

○ 백두혈통 강조로 세습 당위성 선전

- '09. 4. 15 <로동신문>은 김일성 출생 97돌 기념사설에서 세습의 당위성 강조하는 '백두의 혈통' 언급

- '10. 12. 24 <로동신문> 김정일 군 최고사령관 추대 19주년 기념사설에서 3대 세습을 찬양, 백두전통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



- 세습과 관련한 다양한 어휘 등 등장
  - ‘셋별장군’, ‘김대장’, 발걸음
- 속도전을 통한 후계자의 경제분야 성과 홍보
  - ‘09. 5. 4 <로동신문> 통해 150일 전투, ‘09. 10 ‘100일 전투’ 축구 등
- 경제 희생을 통한 주민들의 지지 유도
  - 세습 후계자 정당성을 축적하기 위해 식량, 소비재 문제 해결에 주력
- 김정일 현지도도 동행 등 공식행동 개시
- 대외적으로 지지 확보
  - ‘10. 5 김정일 방중 통해, “양국은 시간 흐름과 세대교체로 인해 앞으로 변화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언급, 후진타오는 “양국 우호관계는 시대 흐름과 함께 발전시키고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된 역사적 책임”
  - ‘10. 8 김정일 방중 통해서도 후계문제 제기
- 김정은은 당 대표자회 이후 첫 공개 활동은 ‘10. 10. 5 강원도 안변군의 미사일부대(851군부대) 훈련 참관
  - 김정은 주로 군부, 체제보위기관 시찰에 역점
  - ‘김정은관’이 조선혁명박물관 안에 설치, 당 간부에게 공개(2010. 7)

#### 4)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후계자 내정)

- 김정일 체제 공고화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본격화 토대 마련
  -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당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 기관 선거
  - 김정은에게 인민군대장 직위 부여,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임명으로 후계자 지위 사실상 공식화(후계자 위상확립과 세습과정 본격화 및 제도적 장치)
  - ※ 2011년 신년공동 사설에서 ‘당대표자회를 통해 주체혁명 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근본 담보가 마련' 되었다고 강조

-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제6차 당 대회('80)에 버금 갈 정도로 당 조직 및 인사개편 정비·보강(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비서국, 정치국, 전문 부서장 등)

- 노동당 기능과 위상이 회복

※ '93. 12 당 중앙위 전원회의 이후 주요 당행사 전무

- 30년 만에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과 군의 견제·협력 구도 마련

- 서문에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확립'한다면서, 선군정치에 대해 최초 언급
- 선군정치 지속에 따라 권한이 커진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당규약 내용 개정·보완

- 선출된 당 간부 면모는 김정일 친족 및 최측근 실세 등이 지도부 장악

- 김정일 친족·최측근 등이 고위 핵심보직에 유입 및 재배치는 김정일 이후를 대비, 김정은 후계세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과 '직할통치' 지속을 의미

- 당 규약 개정 통해 3대 세습을 뒷받침하는 정당성 마련

- 북한을 '김일성 조선', 노동당을 '김일성 동지의 당' 및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 핵심부대 이자 전위부대'
- 당의 임무로 '당 건설의 계승성 보장' 명시
- 후계자의 정치적 권력기반 취약한 여건을 감안, 후계세습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당규약 개정·보완
- 당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임하는 규정(22조) 신설로 향후 후계자가 당 총비서직을 승계하는 것만으로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권력자의 갑작스런 변고에 대비하고 후계체제 구축상황에 따라 필요시 권력 승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5) 제4차 당대표자회 개최(2012.4.11, 김정은 공식 권력승계)

- 김정은 중심의 체제출범과 김정일 위상 설정을 위한 당 규약 개정
-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영원히 추대 및 혁명업적 찬양
- 노동당 규약 개정(3가지)
  - 김정일 조선노동당 영원한 총비서, 당·인민의 영원한 수령,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 내용 규정,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업적 보충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고 김정은의 영도하에 김일성·김정일의 주체혁명위업 승리를 위해 투쟁 규정
  -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당의 수반·대표하고 전당을 영도, 김일성·김정일 사상과 노선을 실현할 데 대하여 규정
- 김정은을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당 최고수위(제1비서)에 추대
-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 등 인사

### (나) 김정은 체제 출범 특징

#### 1)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은 김정일 유훈에 의해 이루어진 것

- 유훈통치 통해 김정일과 일체화 시키면서 리더십 정당화와 권력기반 확충 위해 김정일의 권위와 위업 이용
  - ‘10.8 유훈’에 의해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2011.12)
  - “장군님께서는 2011년 10월 8일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 대해 언급, 진심으로 받들고, 일꾼들은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일을 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2012.1.8. 노동신문)
  -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한 문제토의...”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은 조선로동당의 강령적 지침이다”(2012.4. 당대표자회 결정서)



## 2) 김일성 가계의 혁명화, 우상화 통해 김정은 정권 출범의 혈통승계의 정당성 확보

- 당 규약 서문에 김정은을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김일성·김정일 당으로 김일성은 “당의 창건자, 탁월한 영도자,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정일은 “당을 강화발전시킨 탁월한 영도자, 당의 영원한 총비서,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우상화

- 2009년 1월 이후 김정은 우상화는 별도로 집중 전개

-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권위를 이용,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부각시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식출범 가능

## 3) 김정은 후계구축 과정도 김정일의 선군혁명위업 계승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진행

- 제3차 당대표자회(2010.9)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임은 당 중심의 영도체계를 세우되, 군 장악의 현실적 요구 반영

-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군의 교량 역할

- 김일성·김정일에 이은 선군혁명 영도 일관성 유지

※ 2010.8.25 김정일, 김정은은 인민군 전체장병 이름으로 해당지역, 기관의 ‘당 대표’추대 및 군관련 직책우선 부여

※ 김정일은 선군정치 기원이 1995년 1월 1일 ‘다박솔 초소’방문에서 2005년 그 기원을 1960년 8월 25일 ‘류경수 탱크부대’ 방문일로 소급확대함으로써, 1964년 당 사업 시작이기 때문에 군에서 당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정

- 김정은 후계체제의 핵심역량이 ‘백두산 총대’인 인민군대로 “모든 인민장병들은 선군혁명 수뇌부를 총대로 결사옹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사명과 임무를 다해야”(‘조선인민군’ 군 기관지)

## 4)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계는 매우 취약한 1인 지배체제적 성격을 갖고 출범

- 국가정책 결정을 1인 단독으로 하기보다 후견·지지핵심세력과 해당기관 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가능성이 큼



- 주요 부문의 핵심엘리트들이 최고지도자를 떠받드는 상호의존적 형태

※ 과거 최고지도자가 핵심 부문 엘리트들을 지배했던 것과 차이

○ 김정은 권력의 상대적 취약한 점을 대폭 보완

- 2009년, 2012년 헌법개정과 2010년,, 2012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조직 및 주요인사 전면 교체

- 2011년 지방인민위원회 선거 실시로 시·도·군 대의원 전면 교체 및 세대교체·간부 교체

※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김정일의 유훈과 족벌세력

○ 내각책임제 강화

-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 철저히 세운다”(2012.4.6 김정은 노작)

※ 박봉주(당 경공업부장), 곽범기(당 비서), 노두철(내각 부총리) 등 경제부문 내각 주요인사 등용

(다) 김정은 세습 권력의 성공적 승계 요건

1) 정통성과 정책적 성과 확보

○ 승계의 정당화를 위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으로 간직

- 당 건설과 혁명을 개척하고 이끈 ‘백두혈통’의 계승으로 혁명과업 지속

○ 후계자는 지배이데올로기 해석권 장악으로 정통성 강화

- 전임자 사상이론 업적 고수·발전시키는 역할 담당

※ 김정일도 김일성의 혁명전통 절대화를 통해 주체사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강화



- 주민들의 새 지도자에 대한 정책적 업적 요구에 부응

## 2) 새로운 권력기반 제도적 구축

- 김정은은 자기권력 구축 시간 부족으로 새로운 권력기반 형성 필요
  - 과거 권력 결탁자들의 제거와 새로운 권력 창출에 있어 어려움 극복이 과제
- 정치체제 안정을 위해서 자신 중심의 권력과 부의 지배 연합 강화
  - 김정은 정치권력 체제는 권력의 집중도에서 완전한 단일지배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자기권력의 확장이 요구됨

###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 (가) 김정은 체제의 기본 과제

- 김일성은 강성대국 건설, 조선반도 비핵화, 조국통일 3대 유훈을 김정일에게 남김(조선신보, 2010.10.2)
- 김정일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집약형 산업에 기초한 지식경제강국 건설과 조국통일 과제를 김정은에게 남김
  - 김정은은 정치사상, 군사강국을 더욱 발전시켜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여 통일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상황
- ※ 김정은 4.6 담화: '선군노선 준수하면서 경제재건' 강조
- ※ 김정일 유훈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 김정은 영도따라 주체혁명 계승 완성, 김정은을 당의 중심으로 받들어 정치사상 강국 위력 발양, 김정일의 선군조선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군사강국 강화(2011.12.31 당중앙위 정치국회의 결정 채택)
-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 집권 기간 중 추진했던 사업방식과 사상적 토대와 함께 완성하지 못한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과제를 유훈으로 안고 출범



## <기본과제>

- △ 권력구조 정립 문제: 3, 4차 당대표자회, 당 규약·헌법개정, 세대교체 등 당·정·군 기구·조직 및 인사 개편 등이 있어 자기 권력기반 확충의 문제
- △ 경제난 해결을 위한 변화 요구 점증: 계획경제와 시장화, 경제에 대한 역할 조정 문제(내각과 군), 개혁·개방 등 인민생활 및 경제회생 문제가 제1의 과제이자 현안
- △ 북핵문제 등 체제안전보장 문제: 평화협정 체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 등
- △ 대외 및 남북관계 개선 문제
- △ 강성대국 건설 등의 체제 유지와 생존 문제 등의 지속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 <김정은의 핵심 현안 과제>

- △ 김정은은 단기간의 압축적 후계과정 추진으로 지속적인 권력기반 확충 필요
- ※ 김정일의 권력승계 당시와 지금의 대내외 사정이 권력승계에 어려움이 상당
- ※ 김정은 권력이 점차 확대되고 세대교체 등에 따른 정치세력의 분화재편, 세력간 갈등, 숙청 등으로 체제의 불안정 증대 가능성에 대한 대처·극복
- △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극악한 상태로 지휘부에 대한 신뢰와 충성, 미래에 대한 기대 취약, 인민정서 수렴을 통한 체제결속·정착이 최대현안
- ※ 북한사회의 변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생활 개선과 체제에 대한 지지·충성 유도

### (나) 정치적 과제

#### 1)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데올로기 정립·발전

- 후계자론에 의하면 '후계자는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절대적 지위로 역할'
- 수령의 사상이론적 업적 고수·발전시키는 역할



- 통치이데올로기 해석권 장악 및 발전적 정립을 해야 제도·형식적 권력지위와 함께 인격적 리더십까지 갖추어 최고통치권의 지도자로서 면모 과시 가능
- 김정일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및 유일사상을 확립하였음
- ※ 주체사상을 철학적 체계 완성과 함께 “전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자”는 지배 이데올로기 장악·관철
- 김정은이 통치이데올로기를 명확히 확보하고 이에 대한 해석권과 발전적 정립을 해야 함
- ※ 권력교체기, 대내외 위기국면 등에서 통치이데올로기 정립·발전 문제는 권력투쟁 및 갈등 등 논쟁의 핵심대상임
- 김정은 체제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체계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감안, 새로운 체제의 발전적인 통치이데올로기 해석 및 정립 등 체계화 필요
- 이러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정립·발전이 명확치 않고 지지부진할 경우 리더십의 공백과 연결되기 쉽고, 통치에 있어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큼.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권력, 권위 등 대내외적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가능

## 2) 김정은 권력·권위 확보를 통한 체제 정착

- 강력한 권력의 지배연합 구성으로 권력의 집중을 통한 정권의 안정화 및 정착
- 분야별 핵심엘리트들에게 권력 배분과 경제적 보상을 통한 충성과 지지 유도
- ※ 통치자금 확보 및 활용은 권력체제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군부가 경제편익의 최대수혜자로 이익집단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경제와 군부의 조정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



-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은 특별한 문제없이 마무리
- 이는 핵심엘리트들이 김정은 정권의 안착이 자신들의 권력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 가계와 운명공동체로서 동행이 불가피

### 3) 김정은 권력안착을 위한 내재적 과제

- 권력에서 퇴각한 세력과 구 군부인사들의 반발가능성을 신군부·신진당료·공안 부문의 연합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가 주목되는 점

- 경제문제의 주도권을 내각으로 이관하여 군부의 경제이권이 박탈된다면 권력 대립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또한 김정일 세력들이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있어 세대교체 등 권력교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과제

- 지방세력의 쇄신·교체 필요

- 지방세력은 주민중심의 시장세력과 강력한 연대를 갖고 있어, 교체 따른 민심 이반 및 반발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대처 필요

- 김정은의 빈곤한 정치적 경험 및 열악한 체제의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주요 과제

- 족벌세력과 측근 후견세력 지원의 한계
- 이익집단화된 군부, 시장화 확대에 의한 주민들 의식변화, 시장과 권력의 조정 문제, 심각한 경제난, 남북관계 및 적대적 대외관계, 주민과 사회와의 연대 파괴에 따른 부패만연 및 퇴락한 사회분위기 등

※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김정은 체제 안착이 가능할 것임

-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은 경제난 해결과 김정은 자기 권력체제 구축임

- 유훈 또는 후견그룹의 지원에 의한 간접통치에서 직할통치체제로 전환해야 함



## (다) 경제적 과제

### 1) 경제문제 해결 없이 김정은 체제 안정화 불가능

- 경제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 특히 식량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
  - 인민경제 개선 등 경제회생에 역점
- ※ 김정은 체제가 중·장기적으로 경제개선의 업적과 현실적인 전망과 vision을 보이지 못하면 주민들의 지지·결속기반 취약으로 체제안정화 곤란
- 경제개혁과 체제정착 강화 동시 해결의 어려운 상황
  - 선군정치 불포기 상황에서 경제회생 방안강구, 즉 선군경제 기조 유지하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시도 예상
- ※ 이러한 난제 해결 위해서 대남경협 복원도 시급한 과제
-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성과를 보여야 주민들의 지지·충성 유도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경제문제라기보다 정치의 문제임
  - 경제문제는 정치·안보 논리중심으로만 문제 해결하는데 한계, 경제문제 해결은 새로운 리더십 정착에 긴요

### 2) 당분간 유훈통치 통한 정책을 추진하되, 일정시점 이후 경제분야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와 차별화 시도로 새로운 변화 모색 예상

- 경제개혁 및 민생경제 중심의 현지도 실시 등 새로운 변화 모색
  - 김정은 제1비서가 “지식기반 경제에 집중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경제개혁 사례 검토”(2012.1.18 연합뉴스)
  - 김정은 제1비서가 당 간부들에게 “자본주의 방식 도입을 포함한 경제개혁 논의” 촉구(마이니찌 신문, 2012.4.16)
  - 민생경제 중심의 현지도 실시, 평양시 건설, 대량 주택 건축 등 주민 생활경제 개선에 역점
- ※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생활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과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원만히 해결...”(2012.4.6 당간부 담화)



○ 6.28 경제 조치 등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정립 위한 시험 등 다양한 경제 개선방안 모색 중

- 향후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제시 주목

### 3)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른 문제점 극복

○ 북·중 경협 활성화로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집중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사회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 북·중 경협의 조절과 함께 남북경협도 추진하여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임

-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너무 심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 추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것임

※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일방적 단순 방안보단 포괄적인 대외협력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임

### (라) 외교적 과제

#### 1)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핵문제 해결

○ 관련국과의 협의 및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북·미 관계개선은 물론 체제안전 및 경제회복의 계기 마련이 어려울 것임

#### 2) 북·일 관계 및 북·러 관계 개선 추진

○ 북·일 관계 개선과 북·러 관계 개선을 통해 대외경제협력 체제 마련과 주변국과의 다양한 외교 확대를 통해 대내문제 해결의 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북한의 경제 및 제재 등 현안해결을 미국만 갖고는 어려울 것임. 주변국과 다양하고 포괄적인 접근 통해 문제해결 계기를 마련해야 함



### 3) 북·중 경협 추진에 따른 의존도 조정

- 북·중 경협 등 관계 개선 긴밀화는 바람직하나 그 의존도가 너무 심화되면 경제 이외에 정치·군사·사회 등 제반 영역에 까지 영향 미쳐 부정적 결과가 노정될 것임
- 따라서 한국·미국 등을 중심으로 일본, 러시아, 유럽 등과 다양한 협력관계는 유지하여 균형있는 대외관계 수립이 바람직할 것임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발표된 주요정책 방향

#### (가) 주요 정책방향(4.6 담화, 4.15 연설 내용 중심)

##### 1) “김정은과 당중앙위 일꾼들의 담화”(4.6)

- 4월 19일 노동신문을 통해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 제목으로 공개
- 특히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원만히 해결할 것”을 강조

##### 2) 김일성 출생 100주년 열병식의 김정은 연설(4.15)

-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위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 강조

#### (나) 주요 정책 방향 내용(2가지 문건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문건 참고)

##### 1) 수령영생 사업

- “수령영생 사업을 순결한 양심과 도덕적 의리심 갖고 진행”
-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모시고, 영생탑 건립”



## 2) 유훈관철

-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끝까지 관철, 구상과 염원 실현”

## 3) 선군정치

- “선군혁명로선에 따라 군사적 위력 강화, 수령의 군대·당의 군대·최고사령관의 군대로 만들어야 함”

## 4) 수령결사옹위

-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명이며,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중심·영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체혁명 완성·구현”

## 5)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임(사상, 총대, 과학기술 중시)”

## 6)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

- “조선로동당 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

-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

- ※ 김정은은 김일성주의 정식화, 김일성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 사상, 선군정치이론으로 심화·발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리론 제시”

## 7) 경제강국 건설

-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 세차게 올려 경제강국 전면적으로 건설”



## 8) 핵 보유국

-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선군혁명전략에 의해서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변, 정치군사적 대결전에서 백승 떨칠 수 있음”(중앙방송, 4.9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9돌 기념보고대회)

## 9) 내각중심 경제운영

-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률과 질서 확립”

### (다) 2012년 주요정책 과제(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 발표)

#### 1) 경제전반의 정책 목표

- “경공업과 농업부문 역량 집중,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 높이 경제강국 확고한 토대 구축”

- 인민생활 향상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 2) 주요 분야별 추진과제

- 소비품 생산 증대 위한 경공업 공장, 생필품 생산기지 증산
- 농업부문은 축산기지과 과일생산기지 생산 증대
- 공업부문은 화학공업부문 집중 강조, 4대 선행부문 추진
- 건설부문은 인민생활관련 건설에 우선 집중, 평양시 꾸리기 강조
- 대외경제부문은 수출품 생산기지 활성화, 경제무역지대 개발 및 합영·합작 확대, 경제기술협력 강화 등



## 김정은 체제의 변화전망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압축적 과정에 의한 권력승계로 정치적 경험 부족과 자기 권력체제 구축이 확고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 더욱이 정치적 자산 및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경제적 상황이 최악인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 특히 주민들의 지지와 체제결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장화의 확대·축소 문제의 효율적 관리·통제가 여하이 되느냐가 향후 김정은 체제 안착에 중요 변수가 될 것임
- ※ 김정은 제1위원장은 '4.15 연설'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
- 동시에 세대교체 및 확고한 권력과 권위가 보장되는 확고한 권력체제 정착이 시급한 과제임
-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해 견해가 교차하나, 대체로 정권의 공식출범이 안정적으로 진행됐고 큰 문제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3-4년 후 김정은 정권의 정책성과 등을 비롯 변화여부에 따라 정권의 안정화 및 권력투쟁 발생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
- ※ 향후 3-4년의 북한체제 유동성에 주목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대북정책 추진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향후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적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 주민들의 지지를 유도하여 정치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 인민경제생활 개선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선군경제 발전을 유지하되 변화를 단계적으로 과거와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시도할 것으로 예상
- 만성적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서 남쪽의 지원·협력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남 경협을 추진할 가능성



※ 북한의 전환기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계기 마련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김정은 체제의 성공여부는 '고난의 행군'의 경제난으로 상징되는 김정일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뛰어 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남북분단체제의 갈등과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아무 진전 없는 정체상태를 유지한다면 북한 내부 경제개혁 등 변화는 불가능
- 유훈만으로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임

※ 남북관계 복원, 발전 및 북미관계 개선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에 한계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지도자의 리더십 손상을 초래하여 체제 안정성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임

○ 현시점에서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대내외 정책성과 여부와 권력 엘리트 그리고 주민들 간의 세력관계에 따라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변화 예상

- 중장기적으로 과거 행태와 방식에 의한 정책추진이 지속되어 경제회복과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 등이 안 되면, 대중국 의존이 더욱 심화되어 한계에 직면, 정권과 주민간의 관계 변화와 권력엘리트 사이의 상호관계 변화로 새로운 상황 봉착 가능성
- 또한 김정은이 확고하고 새로운 면의 통치와 vision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책갈등이 이념변화와 당·정·군 부문별 핵심계층의 집단적 국정운영 도래 가능성도 배제

○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나, 정책성과가 없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신·구세력의 대립·조정, 정책성과에 따른 주민들의 지지 및 신뢰확보를 위해 핵심후견그룹이 얼마나 상황을 조정·극복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

